

# ‘내란 잔재 청산’ vs ‘검찰·사법개혁 매몰’ 與野 충돌 예고

李정부 첫 국감 오늘 개막

조희대·김현자·이진숙 등 출석 힘겨루기  
與, 卽 출석 압박…국힘 “삼권분립 훼손”  
대왕고래프로젝트·관세협상 등 현안 주목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이 오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온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감으로 무대를 옮겨 양보 없는 정국 주도권 쟁탈전을 지속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잔재 청산 국감’으로 규정, 윤석열 전 정부를 겨냥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 기관을 상대로 12·3비상계엄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대명제로 제시한 3대(검찰·인론·사법) 개혁도 신속히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사법 개혁 등에 매몰돼 민생을 놓치고 있다는 자체 진단을 부각하면서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감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국정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는 13일 국감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둔 12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마련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연합뉴스

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이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

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감 출석 압박이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사법부 겁박이라고 규정한다.

국회 과방위의 14일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제포와 방통위 폐지를 둘러싼 불

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당장 이 전 위원장의 출석부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이 전 위원장을 정부 기관 장으로서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후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위원회의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도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제포와 석방 논란이 도

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른바 성남라인으로 야당에서 ‘만사현통’으로 칭하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및 출석문제도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다.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국회 운영위의 15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은 이미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실세 위의 실세’라며 그의 출석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불순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3일 국정감사에서는 전·현 정부의 국정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 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현 정부의 코스피 3,600선 돌파 등 성과를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집중 부각하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등 포퓰리즘식 현금 살포 정책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 李정부 ‘RE100 산단’ 조성 법적 뒷받침

김원이 ‘재생에너지 특별법’ 대표발의  
“오픈AI-SK 데이터센터 사업 연계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RE100 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RE100 산단 특별법’은 김원이 의원의 제22대 총선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별법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업과 정수 기능을 함께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 성장 유망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연계·순환될 수

있도록 전력 생산·공급 기능과 이를 활용하는 산업·정수 기능을 집적한 지역으로 정의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산업시설지구(산업단지)와 배후정수지구(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와 안정적인 송·배전망 조성을 위한 분산형전력망지구를 조성·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소비하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내 발전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생에너지 부지 확보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설비투자에 대한 저리 정책금융 지원 등 지원 근거를 포함했다. 또한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능형 전력망 구축 지원 방안도 규정했다.

이러한 ‘지산지소(地産地消)’ 전력 생태계를 통해 산단 입주기업들은 안정적으로 RE100을 달성하는 동시에, 훨씬 저렴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업 유치 및 정수 여건 조성을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입주 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 행정·재정적 지원, 부담금 감면, 기술 개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외국인근로자 입주 기업 우선 배정 특례를 마련했다.

신도시급 정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자율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설립·운영, 교육재정 지원, 의료시설 설립 등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RE100 산단 특별법이 전남에 구축될 오픈AI-SK 합작 AI 전용 데이터센터 사업과 연계된다면 목표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판결 항소 포기 환영”

金지사 “국가 과거 잘못 인정 상징적 선언”

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양시원 기자

전남도는 12일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법무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되찾고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비극이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교훈”이라며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상징

광주서 車부품 ‘E7-3 비자’ 시범운영

광주시가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 외국인 기능인력 도입을 위한 취업비자(E7-3)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경북·충북·충남 등 4개 지역이 E7-3 비자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2027년 9월까지 2년간 운영된다. 1차년도인 2025년에는 전체 100명 중 광주에 40명이 배정되고, 2차년도 배정 규모는 1차년도 성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금형·성형·용접 분야에 외국인 기능인력을 시범적으로 도입,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0·11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외국인 인력의 기량검증을 실시한 뒤 수요 기업에 총 40명을 배치해 올해 안으로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